

## 전북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행자부, 50억8000만원 축소

###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 법령 위반이 원인 계약업무 소홀로 전주·완주·익산 등이 줄어든 듯

전북도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수십억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감액 대상 지자체는 전북이 50억 8,000만원으로 서울 87억2,0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5억6,000만원, 충북 26억 원 등의 순이다. 이는 20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

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등 수입 징수 태만이 54억 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5개 단체, 5억원~10억원 7개 단체, 1억원~5

억원 23개 단체, 1억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됐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계약 업무 소홀로 전주시는 8억1,000만원, 완주군은 6억6,000만원, 익산시는 5억4,0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억1,000만원이 감액됐다.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가 13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징수태만에 따른 감액사례로는 지방세 수입관리 소홀로 소멸 시효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징수권이 소멸된 서대문구가 3억4,000만원, 횡성군이 1억9,000원 감액됐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결정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지난 2014년도 182억원, 2015년도 303억원, 2016년도 382억원에 달했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7월 중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고민형 기자



덕유산 정상에 핀 노란 원추리꽃

14일 무주 덕유산 정상에 노란 빛깔의 원추리 꽃이 개화해 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사진=덕유산국립공원 제공)

## "사드, 중국 군사시설 염탐 목적도 있다"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 백두산 '동평-21D' 배치설에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결정 배경에 중국의 군사시설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도 깔렸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이수혁 전(前) 외교부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사드가 단지 북한의 핵을 방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중국의 군사시설을 들여다

보는 그런 무기체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한 것은 없지만 중국이 항공모함 길러라는 '동평-21D' 미사일을 개발해 백두산 뒤편에다가 배치해 놨다는 설이 있다"며 "이게 미국으로서서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지금 높여야 한다고 판

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이) 너무 갑자기 진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한국)의 팔을 비트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순간적으로 든다"고 말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정이라는 주장을 보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중국의 태도나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볼 때 외교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외교부가 소외됐던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사드 문제는 단지 국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여야 당대표 누가 적합한가?

## 새누리 '나경원' 더민주 '이재명'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나경원 의원과 서정원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을 벌이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나머지 후보들을 큰 폭으로 따돌리며 단독 선수를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새누리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벌여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나 의원은 22.8%, 서 의원은 21.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친박계 이주영 의원과 한선교 의원은 각각 9.4%와 9.3%를 차지했다. 이정현 의원(6.8%), 홍문표 의원(5.8%), 정병국 의원(4.9%), 김용태 의원(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더민주의 경우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이재명 시장이 26.7%로 2위를 차지한 이종걸 의원(13.3%)을 크게 앞섰다.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은 12.4%로 뒤를 이었다. 일제감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은 11.7%로 4위를 차지했고, 추미애 의원(5.5%)은 후보 중 제일 마지막 순위였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김진표 의원은 7.6%,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5.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다. /박용주 기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재정립

## 상담보단 '폭력대응'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이 상담 등 교육 관련 업무보다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SPO와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PO 운영 제도 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SPO는 본래 경찰의 영역인 '폭력대응 및 범죄예방'에 집중하게 된다. 학교 내 폭력 사건과 직·간접적인 업무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117 신고홍보' 등의 홍보활동도 최소 필요한도 내에서 실시한다.

이에 대한 학습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진행했던 '권역별 워크숍' 시 상담윤리 등 직무 도덕성 교육을 더하고 전 SPO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SPO의 학교별 배치법도 바뀐다. 기존 SPO 1명당 10.8개 학교를 맡았던 방식을 넘겨 경찰관 2인 1조로 구성해 정·부 담당자 2명이 함께 21.6개 학교를 맡도록 한다. 가급적 여학교에는 남성 SPO, 여학교는 여성 SPO를 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존 담당했던 상담업무 면담 수준으로 대폭 축소

남녀 경찰관 2인 1조로 21.6개 학교 맡도록 해

기존에 맡았던 상담업무는 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 차원의 '면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폭력과 관련 없는 일반 상담 업무는 Wee스쿨·청소년전문상담센터 등 6680여 곳의 학교 및 교육·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인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불거졌던 SPO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력 경쟁제를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학사 이상 전공자를 뽑는다. 내년까지 243명을 채용, 2018년부터는 10년 간 895명을 추가로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SPO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협조해 외부 전문위탁교육을 맡는 등 기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등 관련 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녀공학에 여경 담당자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내·외 이성학생 상담 시 부담당자가 동행하고 여학생 성 관련 민감 사안은 여경이 수행기로 했다. 학생에 대한 면담이 필요한 경우 면담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정했다. 사안에 따라 교외에서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상담 장소를 이용토록 했다. 이의 교육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교육부, 지방청·교육청, 경찰서·교육지원청 및 학교 간 단위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한다. 추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과 대상별 중점 추진 전략, 중장기 발전 방안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활동지침과 기관별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지침과 협업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SPO가 해야 할 경찰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상호 간 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 매일 INDEX

- 2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특장작물 편중
- 4면 전주원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여전히 특장작물에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전주원주 시내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실제 이동패턴에 맞춰 개편된다.

##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문화·관광·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사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정기 의사 기념관